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91.86	↓ 코스닥	841.91
	(-42.84)		(-13.74)
↑ 금리 (미국 9년)	3.468	↑ 환율 (원/달러)	1382.20
	(+0.041)		(+9.30)



‘미국채급등’ 주담대 직격탄... 영끌족 이자 폭증 우려

美 고물가·중동불안 등 악재로 미국 국제 2년물 금리 4.98%로 ↑ 국내 은행채 금리도 0.17%p 올라 신규차주 당분간 고정형이 유리

금리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지고, 중동 정세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22~5.62%,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88~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고정형 금리가 3.19~5.31%, 변동형 금리가 3.82~5.95%인 점을 고려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이 0.31%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상단이 0.13%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의 금리는 3.9%로 이달 1일 3.73%와 비교해 0.17%p 올랐다.

은행채 금리는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며 올랐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는 4.64%로 전날보다 0.62%p 올랐다. 2년물 금리는 0.58%p 상승하며 4.98%로 집계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지자 국제금리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으로 확대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아시아시장에서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43달러로 전날보다 3.81% 올랐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4% 상승한 86.05달러에 거래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오르고 있다. 변동금리의 준거금리인 코픽스의 경우 4개월째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은행들이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했다.

여기에 현재 금융당국은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도록 추진하는 상황이다.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기 위해선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야 매력적이 있는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더 이상 고정형 주담대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세계 3위’

2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2년여 만에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뉴시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변동형 대출금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분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차주의 경우 우선 고정형 대출을 선택한 뒤 금리가 내려갈 시기 등을 본 뒤 변동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투세 폐지” 국민청원 5.6만명 동의 증권업계 “빨리 결론내야”

관련 시스템 구축 따른 비용 부담 중소기업 내부인력 흡수 우려도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재로한 국민청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증권업계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원은 9일만에 빠른 속도로 모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 서명 인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만6525명 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18일 회부됐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 예정인 상황에서 발생한 청원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이

반 총선에 패하면서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인 고모씨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갈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이 연말 추가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추가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증권업계도 금투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올해 초 증시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나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에 동감하지만, 일단 금투세 향방이 빨리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울 인구 감소세... 5년 내 100만명 더 줄 듯

13년새 강동구 인구의 2배 줄어 2029년께 900만명 선 무너져

서울지역 인구가 13년여 만에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서울 거주민 수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선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시 지역 인구는 향후 5년 내에 800만명대로 내려온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인구는 938만명으로, 1년 전(942만명)보다 4만명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감소분(12만명)의 1/3을 차지한다.

이 지역 거주민 수는 지난 2000년대에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0년 10월 ‘전 고점’(1032만명)에 달했다. 이후 1~2년간 완만한 내림세 또는 이른바 ‘보합’ 흐름을 보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 왔다. 국

내 총인구 감소는 이보다 늦은 2019년 12월에 시작됐다.

전 고점과 비교하면 서울 인구는 무려 94만명 감소했다. 13년 사이 1032만명의 9.1%가 사라진 것이다. 감소분(-94만명)이 올해 3월말 기준 경기 성남 인구(91만명)를 넘어선다. 이는 또 서울 강동구 인구(46만명)의 갑절 이상이다.

총인구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월 기준 1/5(20.4%)에 달한 바 있으나, 지난달엔 이보다 2.2%포인트(p) 떨어진 18.2%로 집계됐다. 수도 인구의 ‘최고점’이자 역사상 정점은 1992년 12월 기록된 1093만명이다. 이에 비하면 155만명 사라진 것이다. 그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10월에 2차 정점을 만들어냈다.

2019년 3월에 서울 인구는 977만명이었다. 앞으로 줄어드는 폭(-39만명)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9년께 900만명 선이 무너진다는 산술적 셈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추계는 서울 인구가 2029년 899만명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어 2049년에 추가로 100만명 더 사라진 799만명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조성에 따라 서울 인구는 경기·인천 등지로 계속 유출됐다. 또 2010년대 들어 행정도시 세종으로도 분산됐다. 저출산은 물론, 2010년대 후반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층 거주민의 탈서울 행렬 또한 급격한 감소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尹 회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의 전망 /사진 뉴시스
▲ 野 6당 채상병 특검법 합동 추진... ‘거부하면 윤석열 특검 될 것’

▲ 홍준표 “한동훈이尹 배신”... 한동훈 “배신 말아야 할 것은 국민 뿐”
▲ 與, 새 지도부 편성 난항...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긴 신세 될 것



▲ 안철수 “이재명 25만원 지급 공약따르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 /사진 뉴시스
▲ 與 ‘한동훈 책임론’ 분분... “능력 과신해 참패” vs “홀로 여당 향한 폭격 막아”